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푸른 산’ 조성과 경제·생태 인식: 〈대한뉴스〉의 ‘식목일’, ‘산림녹화’ 행사를 중심으로*

김수자 (이화여자대학교, 부교수)

〈목 차〉

- I. 머리말
- II. 1950~60년대 국토개발과 산림정책의 조립사업 실시
- III. 1960년대 식목 행사와 산림녹화 조직 정비
- IV. 〈대한뉴스〉를 통한 정책 선전과 ‘자발성’ 홍보
- V. 맺음말

국문초록

해방 직후부터 황폐해진 산을 푸르게 만들기 위해 실시했던 연례행사 중 하나가 ‘식목일’이다. 〈대한뉴스〉는 대해 식목일 행사를 제작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하였다. 1960년대 상영된 〈대한뉴스〉의 산림정책 관련 주요 내용 및 장면은 헐벗은 강산, 민둥산을 보여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린 학생들의 식목 활동, 군인들의 조립활동 등이다. 이것은 식목 활동의 최종 목표가 ‘붉은 산’을 ‘푸른 산’으로 만드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식목 행사에서 조립사업을 펼치는 단체, 개인들을 보여줌으로써 ‘자발적’ 참여임을 강조, 더 많은 동원을 이끌어 내려는 의도가 있었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 B8069796).

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산림정책의 목표는 경제개발, 경제발전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것은 식목일 행사 및 산림녹화 사업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푸른 산' 조성의 궁극적 목적이 전체 생태환경과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한 자연환경의 조성이기보다는 '경제발전'의 기반을 확립하는 것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제어: 대한뉴스, 식목일, 산림녹화, 산림정책, 푸른 산, 경제발전, 동원

I. 머리말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정권의 통치의 기본 방향은 쿠데타의 명분이었던 '반공 강화'와 '경제발전'이었다. 반공과 경제발전은 국가의 정치, 경제의 공적 영역에서 뿐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까지 깊숙이 영향을 미쳤다. 1960~70년대의 국토종합개발 및 산업개발의 최종적 종착지 또한 경제발전임을 강조하며 실시되었다. 그러나 정권 초기에 실시한 정부 주도의 각종 개발 정책의 성과는 크지 않았다. 홍보물이나 방송 등을 통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발표하였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¹ 뚜렷한 성과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박정희 정권은 국민의 '적극적'이며 '자발적' 참여를 동원할 필요가 있었다. 자발적 참여를 꾀하기 위해 박정희 정권이 활용한 것 중 하나가 <대한뉴스>였다.

시청각 영상매체로서 <대한뉴스>는 '보이는 신문(visual paper)'이면서 동시에 문자 전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계몽적 성격이 강한 홍보물이라고 할 수 있다. 시청각 매체를 통해 받아들이는 정보는 즉각적이면서도 사실성을 높일 수 있으며 동시에 보여주는 이미지에 대한 감각적 반응이 수동적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보여주는 측'의 의도에 순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한뉴스>와 같은 뉴스릴(Newsreel) 기록영화는 목적을 가지고 촬영되었다.² 그래서 많은 권력자들은 영상매체를 정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1960년대 박정희 정권도 국가정책 및 사업을 홍보할 목적으로 <대

1. 대통령 비서실, 「식목일 행사 기념사, 「산림기술자대회」, 『박정희대통령 담화문』, 대한공문사, 1973; 강성원,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산림법 제정과 녹화사업」, 『한국근현대사연구』 92, 2020, 141쪽.

2. 양정심, 「영상기록에 담긴 해방과 한국전쟁의 일상」, 『사림』 제72호, 2020, 238쪽.

한뉴스》를 제작하여 영화 상영 전 '관객'들에게 보여주었다.³ 국민계몽, 국민 동원의 차원에서 <대한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던 부분 중 하나가 매해 실시되었던 식목일 행사, 산림녹화사업이었다. <대한뉴스>나 담화를 통해 박정희는 식목일 행사를 '경제발전'과 연결시켰으며, 산림녹화사업을 '혁명사업' 완수를 향해가는 중요한 일로 삼았다.⁴

본 연구는 국립영화제작소에서 1960년대 제작한 <대한뉴스>의 '식목일 행사', '산림녹화', '사방사업' 등 산림정책 관련 영상자료뿐만 아니라 대통령 담화 자료집 등을 통해 1960년대 산림정책과 식목 행사가 강조하였던 지향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1950~60년대 국토개발과 산림정책의 조림사업 실시

1945년 해방 직후 대부분의 산림은 일제 식민지 말기의 황폐화된 상태 그대로 방치되었다. 1940년대 일제는 조직적으로 산림을 수탈, 전국에서 나무를 베고 남은 그루터기를 모조리 파헤치는 한편 송진을 채취하여 군사용 유류 대용품으로 사용하는 등 전쟁물자 조달을 위한 산림 훼손이 심각하였다.⁵ 해방이후에도 귀환동포 등을 포함한 인구 증가, 무질서한 임산(林産)연료 채취와 산림의 남벌, 국가관리의 허술 등으로 산림의 황폐화는 가속화 되었다.⁶

산림에 대해 정책적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47년 미군정이 식목일을 제정하면서 부터였다.⁷ 미군정은 1948년 식목일을 공휴일로 제정하여 나무 심기를 실시하였다.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에는 농림부를 중심으로 국민들

3. <대한뉴스>는 극장에서 영화 상영 전 국민에게 국내외의 중요한 뉴스를 전해주기도 하고, 정부의 방침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국민을 단속시키기 위한 정책 홍보 수단으로 활용도가 커지면서 비판받았지만, 1994년까지 극장에서는 상영되었다(「시의성 없이 정부 홍보만 일삼는 대한뉴스, 문화영화」, 『한겨레』, 1988.6.16)

4. 1960년부터 1969년까지 <대한뉴스>는 식목일 행사를 제작, 상영하였다. 그러나 현재 1964년 제19회 식목일 행사와 1967년 제22회 식목일 행사 자료는 보존되어 있지 않아 자료로 활용하지 못하였다.

5. 강영심, 『일제의 한국산림 수탈과 한국인의 저항』,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7, 168쪽, 182쪽.

6.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숨은 기적들, 숲의 역사 새로쓰다』, 나남, 2015, 20쪽.

7. 「제1회 식목일기념식 거행」, 『동아일보』, 1947.4.6.

8.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법률 제10호 '식목일' 공포」, 『군정청관보』, 1948.3.31.

에게 애림(愛林)사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매년 4월 1일부터 1주간을 애림주간으로 제정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식목에 대한 지원이었다. 구체적으로 “자력으로 조림을 기(企)하는 인 사에게 소요 묘목을 알선하고 묘목 대금의 3할에서 5할 정도의 국고보조”를 해 주는 것이었다.⁹ 세 번째는 담화 발표 및 영화 상영을 통한 선전이었다.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담화 발표를 통해 식목의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관련 영상물을 제작, 본 영화 상영전에 문화영화의 형태로 상영하였다. 네 번째는 중앙청 각 부처 장관을 수반으로 농림부의 실·국장 및 산림국 간부 등을 중심으로 독려반을 조직, 활동하였다. 조직된 ‘독려반’은 애림기간 동안 각도를 순행하며 조림 실시상황을 시찰하고 산림녹화를 독려하였다. 다섯 번째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식목 행사와 더불어 가두선전을 하였다. 여섯번째로는 ‘시민식목등산회’를 개최하여 참가한 사람들에게는 기념품과 기념 묘목을 나누어 주며 험벗은 산을 푸른 산으로 만드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였다. 이와같이 산림녹화 사업은 미군정기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황폐화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한 선전활동, 식목운동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산림녹화의 선전과 식목운동의 핵심적 내용은 “연중 부지런히 산에 나무를 심어 벌거숭이 산을 급속히 녹화하여 삼천리 강산을 녹화(綠化)하자”는 표어에 잘 나타나 있듯이 나무를 심어 빠른 시간에 녹화를 완성하는 것이었다.¹⁰

이 시기 식목 행사의 목적은 홍수로 인한 피해의 원인을 최대한 막는 것이기도 하였다. 산에 나무가 없어 산사태 등이 발생하고 농작물까지 그 피해가 심각하므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나무를 심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조림사업의 성공을 위해 국민들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나무를 함부로 베어 쓰지 말아야 하고, 나무를 보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조림을 ‘애국적’ 행동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1949년 이승만 대통령의 식목일 행사 담화에서 잘 드러난다.

9. 「농림부, 춘계 조림운동을 실시」, 『서울신문』, 1949.3.19.

10. 「정부, 애림주간을 제정하여 녹화운동 전개」, 『서울신문』, 1949.4.1; 「농림부, 조림 3대 원칙과 녹화사업 실행요강을 작성」, 『경향신문』, 1949.4.3.

수목이 있어야 우리나라의 경치가 보기 좋다는 것보다도 우리의 밭과 논을 보호해서 농사를 지어먹으며 과일과 채소를 거둘 자리가 있을 터인데 수목은 다 작별해 버려서 붉은 진흙과 흰 모래가 비에 밀려 내린 결과로 사태가 나서 밭과 논이 다 사장이 되고 말면 어디서 곡식과 과일과 채소를 기르고 무슨 재목으로 집을 지으며 집칸을 만들어 쓸 수 있겠는가. 따라서 수목이 없을수록 비가 아니와서 한재(旱災)가 자주 나며 농사가 흉년이 들고 작물이 말라든다. 이것을 생각지 못하고 나무가 난대로 베어 때고 뽑아버려서 차차 없어지고만 뒤에는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므로 사람마다 적어도 여섯 주씩 심고 하나도 베지 말기를 작정하며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나무를 보호하여 살리는 것을 직책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 이익에 과일과 화초목을 다 일일이 말할 수 없으나 우선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이 우리의 복리가 큰 것이므로 사람마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직책으로 나무를 많이 심고 길러 보호하여야 할 것입니다.¹¹

이승만 대통령은 나무를 심는 것은 실질적으로 농작물 피해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며 나무를 많이 심고 나무를 보호하는 것이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애국심에 호소하는 방식으로서의 애림 운동이나 식목일을 공휴일로 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으나 조림 및 녹화운동의 성과는 미미했다.¹² 이것은 조림사업 자체가 단기간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특성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무를 주원료로 하는 난방과 취사용 뿔감을 대체할 에너지원의 대체물 및 개발이 없는 상태에서 별채를 급하는 조치들을 따르기가 쉽지 않은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았다. 실질적인 후속 조치 없이 무조건적으로 애국심에만 호소하는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1950년 6.25 전쟁의 발발은 산림의 황폐화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전쟁으로 인한 산림피해는 전체 산림면적의 70% 이상을 넘었으며, 1950년대 후반 남한의 산림은 절반 이상이 풀과 나무가 없는 민둥산으로 황폐해졌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11. 「이승만 대통령, 식목일 기념 담화」, 『서울신문』, 1949.4.6.

12. 「대통령령 제124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 『관보 제104호』, 1949.6.4; 「식목일 기념행사 거행」, 『서울신문』, 1950.4.5.

전쟁 이후 산림 복구를 위한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정부 수립 직후의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산림정책에서 연료림 조성에 대해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기 시작한 것은 1959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농림부는 대도시에 임산 연료의 반입을 금지하고, 상공부에서는 무연탄을 가정용 대체 연료 에너지로 이용하는 것을 장려할 정도로 조림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연료용 땔감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그 시작이 공동 연료림의 조성이었다.¹³

1961년 제2공화국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산림녹화 홍보에 착수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제16회 식목일 행사를 맞이하여 '식목일 기념 특수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 사용을 결정한 것이었다. 이것은 4월 첫 주 일주일간 우체국에서 식목일을 기념하는 도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애림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고안해 낸 것이었다.¹⁴ 산림녹화의 대중적 확산을 시도한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2공화국의 장·단기 산림, 식목 정책은 5.16 군사 쿠데타의 발발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1961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경제적 자립을 통한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이야말로 승공통일을 위한 실력배양의 길”이라며 경제적 자립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경제적 자립’이라는 논리에 의거 산림정책도 추진되었다.¹⁵

1961년 6월 박정희 정권은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 법은 임산물 반출증 제도를 도입해 반출증 없이 임산물을 운반하는 것을 단속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나무를 몰래 베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옮기는 부정 임산물의 운반차량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였다. 정권을 장악한지 한달도 안된 시점에서 박정희 정권은 산림 관련 법률을 제정,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산림보호’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1961년 12월에는 ‘산림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을 통해 산림정책의 방향이 나무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새로 심고

13. 배상원, 『산림녹화』, 나남, 2013, 181쪽.

14. 「식목일 기념특수 통신일부인」, 『관보』 4294, 1961.3.25.

15. 전원근, 『1970년대 국토 경관의 사회적 구성:개발과 안보의 재현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9, 47쪽.

가꾸어가는 '식목', '조림'에 강조점이 두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산림법의 제정으로 산림정책은 나무를 심는 조림, 영림계획이 보다 구체화되었다.¹⁶ 한편 1963년 박정희 정권은 '국토녹화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실시하였다. 이 법을 통해 군미필자, 공무원, 학생, 공공단체 직원 등을 강제 동원해 나무를 심도록 하는 긴급조치에 가까운 정책을 실시, 산림녹화에 '국민 동원'을 합법화하였다.

1966년 산림녹화 사업은 '경제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1966년 식목일 행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이상적인 농촌에 대해 "나는 유실수를 많이 심어서 과실을 팔아 농촌이 부유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담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산이 황폐화되어 관상목보다 목재가 되는 용재수종(用材樹種)을 많이 심어야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것은 1950년대 황폐해진 민둥산을 푸른 산으로 만들기 위해 속성수 및 경관을 중시하며 식목이 이루어졌던 것과는 상반되는 것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산에서도 경제성을 담보해 낼 수 있는 유실수(有實樹)와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용재수종의 식목에 중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박정희 정권의 산림정책의 중요한 분기점을 이루는 것은 1967년의 산림청의 신설이라고 할 수 있다. 1967년 산림청은 산림국에서 승격하여 산림정책의 방향을 조직화 및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산림청은 산림정책의 기본 방향을 종래의 소극적인 '산림의 보호'에서 경제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경제림 조성', '생산'을 주도하는 기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¹⁷ 국가경제의 발전과 산림사업은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서 산림청이 승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산림정책은 관공서 중심으로 실시하던 조림과 사방사업에서 전 국민을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행사와 사업의 주 내용은 산림자원 조성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유실수 및 속성수(速成樹) 조림, 대단지 조림 등의 방향으로 진행되었다.¹⁸

16. 육성으로 듣는 경제 기적 편찬위원회, 앞의 책, 39쪽.

17. 산림청, 『한국임정 50년사』, 2007, 300~301쪽.

18. 1967년 초대 산림청장은 치산치수를 제1 목표로 청와대와 긴밀한 관계하에서 본격적인 나무심기와

산림청의 조림사업은 범국민운동의 성격을 띠며 정부 각 기관, 군인, 각 사회단체, 학교, 산림계원이 총동원되어 수행되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박정희 정권은 치산녹화사업을 주민 스스로 마을 산에 나무를 심고, 가꾸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마을지도자 교육, 마을 양묘, 마을 조림, 마을 사방사업을 추진하여 녹화사업이 주민의 소득과 연결, 증대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유도하였다.¹⁹

1968년에는 국군과월기념 조림의 해로 지정하고, 이것과 관련된 용재림 단지 조성, 감나무, 밤나무, 호두나무, 유실수와 대나무들을 집중적으로 조림하여 농가소득의 증진을 꾀하였다.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등의 숲을 시찰하고, 대단지 숲의 조림을 제시하는 등의 장기계획을 수립해 나갔다.

III. 1960년대 식목 행사와 산림녹화 조직 정비

식목일은 제정된 이래 이승만 정권에 이르기까지 나무 심는 조림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날이었다.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고 처음으로 실시한 1962년 제17회 식목일 행사는 동작동 ‘군묘지’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 참여자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요인, 행정부 요인, 사법부 요인, 중요 언론사, 교육, 기업, 금융기관 대표, 외교사절, 시 산하 각종 의원들, 시 직원 전원, 재경 관공서 직원 전원, 일반시민 등이었다. 행사는 식순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식순에는 혁명공약 낭독이 있었다. 행사가 끝난후에는 군묘지 주변의 임야 약 5만 평에 리기다 소나무, 잣나무 등을 식목하였다.²⁰ 이날 박정희 의장은 식목일 기념 식사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

사방사업을 착수하였다. 1960년~72년 사이 주요 침엽수 조림 수종인 리기다소나무, 낙엽송, 잣나무의 조림면적은 총 92만8천ha로 이 기간 조성된 삼림의 47.6%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리기다 소나무의 조림면적은 단일 수종으로는 1년간 조림된 면적으로 최대치에 해당되었다 해방 이후 입목 축적의 17%에 해당하는 1천만㎡ 내외의 목재를 매년 가정용 연료로 소비했다. 위의 책, 181쪽.

19. 배상원, 앞의 책, 177~178쪽.

20. 「제17회 식목일기념행사 계획보고」, 관리번호 BA0084309.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 2020년 10월 3일 접속)

고래로 치산치수는 치국의 요체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림의 녹화가 제대로 되면 푸른 청산 밑에 녹수가 감돌고 기름진 옥답에 겨레의 풍요한 산림을 간직하게 할 것이나, 이에 반하여 험벗은 산야가 풍우로 허물어져 홍수의 참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서는 국민의 생명 재산을 위협하게 할 뿐더러 영농, 기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농정뿐만이 아니라 상공, 교통, 보건 등 제 시책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가중해졌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산림은 인구증가와 동란과 시책의 빈곤과 애립 사상의 희박 등으로 인해 그 임상(林相)이 극도로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비단 국토의 미관만을 주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재산, 자원의 보전을 위해 또한 국가 경제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험벗은 산림의 복구 조성은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초미의 급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혁명정부는 경제개발사업의 일환으로서의 조림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종래의 비효율적인 산림정책을 지양하고 집중적인 복구 조림과 기성 임야에 대한 보호 육성으로 임산자원의 증축을 꾀하고 산지, 해안 등 사방공사 사업에 중점적 시책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영원한 번영과 복지를 위하여 국민이 다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가장 손 쉽고 가까운 일인 애립과 산림녹화사업에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까.²¹

박정희는 산의 황폐화는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하였다. 경제발전을 쿠데타의 명분으로 삼았던 박정희는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산의 황폐화를 해결해야만 했다. 그래서 경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림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사방사업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발표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산의 황폐화의 원인을 기존 정부들의 거둬되는 실정(失政)과 무위무책(無爲無策)이라고 비난하였다. 산림 나아가 국토의 황폐화의 원인은 국민 생활의 빈궁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상황은 궁극적으로 기존 정권의 실정에서 연유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이것은 박정희 자신의 5.16군사 쿠데타에 대한 명분,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논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은 치산치수를 정치의 제일 중요한 요소로 삼아 대한민국 금수강산의 아름다운 옛 모습을 다시 찾기 위한 5개년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5개년 연차계획의 핵심적 내용은 조림과 녹화사업이며,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전국

21. 대통령비서실, 「17회 식목일 기념식 기념사」,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1, 최고회의 편, 대한공문사, 1973, 218~219쪽.

민의 애립사상과 녹화운동에 대한 협력이 요청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녹화운동의 지침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첫째, 나무를 벌채하지 않는 것, 둘째, 나무를 많이 심는 것, 셋째, 아끼고 잘 가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전국민의 일심단결을 강조하였다. 또 산림을 아끼는 길은 곧 조국을 사랑하는 길이라며 식목에 대한 국민적 단결과 애국심의 고취 등을 거듭 강조하였다.²²

한편 같은 해 박정희 정권은 산림조합연합회 조직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산림조합연합회가 산림 녹화사업을 추진하는 자발적인 민간협동단체임을 강조하였다. 박정희는 “정부의 경제정책 중 어느 것이고 국가경제개발이나 국민소득 향상을 위하여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산림녹화는 혁명정부에서 가장 긴급하고도 가장 중요시하는 기본 정책의 하나인 것입니다”라거나 “국가재건의 기본 필수 조건의 하나로 치산, 산림녹화” 사업을 설정하였다는 점 등을 밝혔다.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1차년도인 1962년의 산림녹화사업의 계획량을 예년에 비해서 높게 책정하였다. 이것은 산림 복원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산림 행정기구 재정비에 들어갔다.²³

1962년 박정희는 산림기술자 대회를 개최하여 ‘혁명정부’가 추진해온 1년간의 치산, 녹화사업의 성과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비록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국민이 합심하여 사방 조림 등 치산녹화가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체 평가하였다. 그리고 해방 이후 17년간 국토 녹화가 지상과제임을 인식하면서도 그 정책에 있어 빈곤과 소극성을 띠고 ‘산림애호’, ‘도벌방지’ 등의 구호와 치산치수라는 명분만 내세우고, 제대로 산림정책에 대한 동력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기존 정권을 비판하였다. 기존 정권의 국토재건이나 사회 정의의 구현은 모두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산림정책을 통해 강하게 비난하며 군사 정부와 비교하였다. 현재 자신이 이끄는 ‘혁명정부’가 산림법을 위시하여 국토 녹화정책에 대한 입법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붉은 산’ 일소를 위하여

22. 위의 글, 220~221쪽.

23. 대통령 비서실, 「산림조합연합회 발기인대회(1962. 5. 8.)」,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1, 최고회의 편, 대한공문사, 1973, 224쪽.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녹화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홍보하였다. 나아가 1963년을 '국토 완전 녹화의 해'로 정해 '붉은 산'을 '푸른 산'으로 만들어 미래 세대에 게 남기자고 강조하였다.²⁴

박정희의 산림정책에 대한 담화는 이전 정권이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정책에 대한 비판과 군사정부가 산림녹화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는지를 강조하고 동시에 그러한 노력의 결과가 큰 성과를 가지고 왔다는 자평(自評)이었다. 박정희의 담화는 “정부는 5.16을 계기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산림녹화 및 산림보호를 강력히 추진해온 결과 현저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황폐 임야는 38만 정보나 남아 있습니다. 이와같이 산림이 크게 황폐한 것은 근근 수년간에 기인한 것이며 실로 수 10년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써 그중에서도 특히 가중한 것은 구시대의 정상배들이 각종 선거와 관련시켜 목전의 자기 이익과 지방민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부당 간섭하면서까지 갖은 명목과 수단으로 산림남벌을 합리화하고 자행한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선거가 있을 때마다 산림은 그들의 농락의 대상물이 되었던 것은 현명한 국민 여러분이 더 잘 아는 사실입니다.”라고 발표하기도 하였다.²⁵ 특히 1963년 박정희의 담화는 다가올 선거를 의식하며 기존 정치가들의 산림에 대한 권력 남용이 산림 황폐화의 하나의 요인임을 지적하며 비판한 것이었다.

1963년 박정희는 민간이양 약속을 지킨다며 군복을 벗고 예편한 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다.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며 박정희는 치산 산업은 국토의 보전은 물론 국가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요소이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혁명정부'는 산림정책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²⁶ 1963년 9월 전국 산림대회를 치하하며 “혁명정부는 민족적인 과제로서 수 10년을 끌어오던 황폐된 산림을 복구 완수할 굳은 결의로 작년 가을부터 이

24. 대통령 비서실, 「산림기술자대회(1962. 10.22.)」,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1, 최고회의 편, 대한공론사, 1973, 299쪽.

25. 대통령 비서실, 「제18회 식목일 기념사(1963. 4. 5.)」,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1, 최고회의 편, 대한공론사, 1973, 412쪽.

26. 대통령 비서실, 「산림보호에 관한 담화(1963. 9. 10.)」,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1, 최고회의 편, 대한공론사, 1973, 504쪽.

사업에 착수하였고, 작년의 가뭄과 올봄과 여름에 걸친 풍수해로 말미암아 온 국민은 비통한 재난과 중대한 시련을 겪어야 했을 때에도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여 산림녹화에 대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며 노고를 치하하였다.²⁷ 그리고 동시에 이 산림대회를 대한민국의 ‘산업부흥의 기반’으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당시 박정희는 산에 나무를 심고 황폐화된 산을 복구하는 것은 자연환경의 보호 및 생태의 복원 문제라기보다는 산업부흥을 위한, 경제자립을 위한 활동의 하나로서의 산림사업 즉 경제적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은 박정희 정권의 산림정책에서 일관된 것이었다.

1964년 식목일 행사 담화에서는 산림복구, 산림자원의 성과를 강조하였다. 즉 “우리가 산야의 적화(赤化)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연의 번덕스러운 광포(狂暴)와 그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의 위협을 면할 길이 없으나 반대로 산림의 녹화가 제대로 되면 청산옥수의 미관과 기름진 옥탑을 가꿀 수 있기” 때문임을 강조하며 “지난 3년 기존의 비효과적이며 형식적이었던 산림정책을 지양하고 집중적인 복구 조립과 기존 임야의 보호 육성으로 산림자원의 증대를 도모하였고 산과 계곡, 그리고 해안예의 사방공사 사업에 중점적 시책”을 펼친 것 또한 강조하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나아가 산림녹화사업은 나무를 심는 손쉽고, 자그마한 노력에서 시작하여 심은 나무를 꾸준히 가꾸어 나가는 부단한 작업이며 정부와 국민의 혼연 일체된 단합과 협조를 꾀해야 되는 사업임을 강조하였다.²⁸ 산림녹화 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며 이를 높이기 위해 정부,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정부와의 단합,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대체로 박정희대통령은 식목일 행사 및 산림녹화 사업 담화에서 기존 정권을 비난하는 요소로 산림정책의 실패를 부각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정부의 성과를 드러내 쿠데타를 정당화하는 데 활용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

27. 대통령 비서실, 「전국산림대회 치사(1963. 9. 27.)」,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대통령권한 대행, 박정희 장군 담화문집』 1961. 7~1963. 12. 동아출판사공무부, 1965, 533쪽.

28. 대통령 비서실, 「제19회 식목일 치사(1964. 4. 5.)」,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1, 최고회의 편, 대한공론사, 1973, 78~79쪽.

다. 그리고 산림녹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기 위해 '국가' 주도의 동원을 통한 '단합'을 강조하고, 이것에 따라 조림사업을 실시하는 모습을 군사정부에 대한 지지로 연결시키고자 하였다

IV. <대한뉴스>를 통한 정책 선전과 '자발성' 홍보

박정희 정권의 산림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애국심의 고양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참여, 동원이었다. 자발적으로 식목, 조림사업에 참여해야지만 단기간 내에 산림정책의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었기 때문에 동원을 이끌어내는 것은 중요했다. 그러므로 박정희 정권은 산림녹화 사업에 국민동원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여 '강제성'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실효성이 약했으며 강제 동원에 대한 비판과 반발이 나오기도 하였다. 이에 박정희 정권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이를 위해 적극 활용한 것이 '애국심'을 강조하는 담화와 자발적으로 산림녹화를 하는 현장을 시청각적 매체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대한뉴스>라고 할 수 있다.²⁹

박정희 정권은 <대한뉴스>를 산림정책뿐 아니라 군사정부 전반의 정책에 대한 선전활동의 수단으로 적극적 활용하여 군사 쿠데타의 정당성 부여와 정권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집중하였다. <대한뉴스>는 국내외의 주요 뉴스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시청자에게 전달하여 당시 정부 정책 및 활동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펼칠 목적으로 만들어진 매체이다. 박정희 시기 <대한뉴스>에 담긴 내용은 1960년대에는 5.16 군사쿠데타의 명분이었던 '반공', '경제발전' 그리고 1970년대에는 유신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총력안보'와 '민족중흥'과 닿아 있으며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였다.³⁰

산림정책을 포함한 농업정책에 있어서도 1960년대 박정희는 표면적으로는 경제재건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산업이 1차 산업이며 그중에서도 농업임을

29. 위의 글, 126쪽.

30. 전원근, 앞의 글, 118쪽.



〈사진 1〉 권농일 모내기 참여하는 박정희(1961년)
〈대한뉴스〉 318호



〈사진 2〉 모내기 후 농민들과 막걸리 마시는 박정
희(1961년) 〈대한뉴스〉 318호

수시로 강조하였다. 그리고 농업장려 정책과 모내기 사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1961년 박정희는 5.16 군사쿠데타 한 달 뒤에 제작한 뉴스 영상을 통해 ‘권농일’ 당시 윤보선 대통령과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부의장이 각계의 인사들과 함께 직접 모내기를 하고, 농민들과 막걸리를 나누어 마시는 등의 〈사진 1〉, 〈사진 2〉의 모습을 화면을 통해 보여주었다.

이것은 TV 뉴스와 극장에서 〈대한뉴스〉를 통해 상영되었다. 이와 같은 장면을 통해 박정희는 ‘농부의 아들’이라는 이미지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술선수범’하는 ‘함께하는’ 지도자로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었다.³¹ 이와같이 기존 정권의 정치가, 대통령들과는 다르게 직접 농민들과 농사도 짓고, 막걸리도 같이 마시는 서민적 이미지의 지도자상을 만들고자 영상매체를 적극 활용,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박정희 정권 초기 〈대한뉴스〉에서는 농촌의 부흥, 계몽 관련 뉴스들을 지속적으로 제작, 상영하였다. 거의 매호마다 농촌과 관련된 소식들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중요한 국가 사업에 박정희는 직접 시찰하며 독려하는 모습을 뉴스로 담았다.

박정희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민정을 살피는 행동과 모습을 〈대한뉴스〉로 제작하여 극장을 찾은 관객에 보여주어 술선수범하는 통치자의 이미지가 각인 되도록 하였다. 국토개발 및 산림녹화 사업에 대한 내용이 〈대한뉴스〉를 통해 본격적으로 제작, 상영되기 시작한 것은 1958년 12월 23일 제194호 클립에 들

31. 「제 13회 권농일」, 〈대한뉴스〉 318호, 1961.6.16.

어 있는 <건설의 새 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 <건설의 새 소식>은 비정기적으로 제작되었으며, 뉴스 내용의 전반적 논조는 산림녹화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황폐해진 땅을 하루속히 건설하여 부강한 나라로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1961년 박정희는 <대한뉴스>의 <건설의 새 소식>의 내용 전달 방식을 바꾸었다. 박정희 자신이 직접 건설 현장에 참여하여 독려하고 직접 '일하는 모습'을 화면에 담았다.³² 이것은 이전 정권에서 <건설의 새 소식>을 나열식으로 '말'에만 의존하는 나레이션으로 진행되었던 것과 상반되는 것이었다.

박정희는 직접 건설 현장을 시찰하는 모습을 수시로 시청각 매체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다. 박정희 정권이 초기 추진했던 국토 개발의 주된 내용은 간척사업이었다. 자본력이 부족했던 정부는 농업, 산업, 국토건설 개발 등 전방위적인 국가재건을 위해 국민들의 힘이 필요했고,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했다. 따라서 뉴스영화와 문화영화를 이용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산림녹화 등을 포함한 국가 정책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진 3> 1969년 4월 식목일 행사 <대한뉴스> 712호



<사진 4> 1969년 전국의 녹화현장 격려 <대한뉴스> 712호

<대한뉴스>를 제작하여 상업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서뿐 아니라 이동 상영차를 통해 이동 영사로 농촌마을에서도 상영하는 등 전국적으로 홍보에 나서기도 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정권 차원'이 아닌 '민족사적' 입장에서 일대 전기를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전국민의 총력을 집중하고,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국토녹화를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산림녹화 사업에 대한 단기간의 성

32. 1961년 <건설의 새 소식>은 박정희 의장이 서울 시민회관의 개관식에 참여하여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시민들 앞에서 연설하는 장면을 보도 하였다. 「건설의 새소식」, <대한뉴스> 339호, 1961.11.11.

과를 거두기 위해 영상매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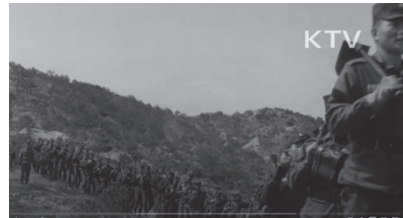
〈표 1〉 1960년대 박정희 정권 시기 <대한뉴스>의 산림정책 내용

연월일	영상 번호	주제 및 내용
1962. 11. 4.	대한뉴스 389호	산림녹화 기술자대회
1962. 12. 16.	대한뉴스 395호	제목: 산림녹화, 뒷받침하는 사방공사 해마다 있는 홍수와 가뭄에 대비, 험벗은 산에 마을 주민들 지계에 나무를 심고 올라가 나무 심는 모습
1963. 3. 23.	대한뉴스 409호	제목: 사방사업 국토산림녹화사업의 일환으로 3월은 사방사업의 달로 천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림녹화 실시 국토녹화운동이 새봄과 더불어 전국에 걸쳐 적극 추진 정부는 국토녹화촉진법을 제정 공포
1963. 5. 11.	대한뉴스 416호	제목: 건설의 새소식 산림녹화사업이 금년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1963. 6. 30.	대한뉴스 423호	제목: 산사태로 한 부락 매몰
1964. 4. 11.	대한뉴스 463호	제목: 나무를 심자(표어로 구성) 좁은 땅에 많은 식구, 나무 심어 살게 하다. 울창한 산림 속에 농토 기름진다. 나무를 꺾지 말고 알뜰이 가꿉시다.
1965. 7. 26.	대한뉴스 529호	제목: 산림녹화- 증산
1966. 4. 2.	대한뉴스 564호	제목: 산림녹화 벌거숭이 강산 3.11~4월 말 춘계 조림 사방사업 전개
1967. 1. 13.	대한뉴스 605호	제목: 산림청 발족 산림황폐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청 발족 전진을 맞는 해, 범국민운동 전개 산이 푸르려야 물이 맑고, 물이 맑아야 인정이 두텁다
1968. 1. 26.	대한뉴스 659호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을 조성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어야 한다. 산림자원은 국력
1968. 6. 8.	대한뉴스 678호	산림개발사업 전국적인 가뭄, 송충이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송충이를 잡자

박정희 정권의 산림녹화와 관련한 <대한뉴스>의 내용은 1966년을 기점으로 이전 시기에는 대체로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산사태 방지의 사방사업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1966년 이후 <대한뉴스>는 산림녹화에 대한 범국민운동 전개와 맞물려 식목일 행사뿐 아니라 산림녹화, 산림청 발족 등 다양한 내용의 산림정책을 제작, 상영하였다.



<사진 5> 1966년 산림녹화 범국민운동 실시
<대한뉴스> 564호



<사진 6> 1966년 산림녹화사업 <대한뉴스> 564호

<표 2>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대한뉴스> 상영 식목일 행사

연도	영상번호	식목일 행사 주제 및 내용	비고
1962	대한뉴스 360호	17회 식목일 기념행사: 헐벗은 강산에 나무를 심자 이제부터 나무를 베지말고 가꾸자.	정부의 연차별 녹화사업 계획 도표 설명 포함
1963	대한뉴스 412호	18회 식목일 행사 전국 각지에서 산과 들에 나무를 심는 모습	헐벗은 강산에 많은 나무를 심는 장면(참여층: 시민, 학생, 공무원들이 참여, 미군부대 장병들도 참여)
1964		제19회 식목일 행사 영상 자료 없음	
1965	대한뉴스 514호	20회 식목일 행사: 정성들여 심은 나무 합심하여 길러내자 (표어)	식목일을 맞아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나무 심음 조림사업 실적 및 계획표 애니메이션으로 설명

1966	대한뉴스 565호	21회 식목행사: 10년대계를 위해서는 나무를 심고 100년대계를 위해서는 인재를 기른다	박정희대통령이 회사하신 나무 푸른 강토 만드는데 앞장 섬 각계각층에서는 자진 봉사하며 나무 심음
1967		제22회 식목일 행사 영상자료 없음	
1968	대한뉴스 670호	23회 식목일 행사: 산을 푸르게	식목일을 맞아 식수하는 박정희 대통령 및 나무 심는 시민들. 산림유공자로 산업훈장 받은 문학술씨 임업의 기업화를 시도하고 있음.
1969	대한뉴스 721호	24회 식목일 행사 오늘 심은 나무 한그루가 10년 후에는 나라 부강의 원천	박정희 대통령의 솔선수범하는 장면 작업복 차림의 박정희 대통령이 솔선수범하고 있음을 강조

1968년 제 23회 식목일 행사는 식목일을 맞아 식수하는 박정희 대통령 및 나무 심는 시민의 모습을 담고 있다. <대한뉴스>는 “오늘 심은 이 나무가 내 강토를 푸르고 기름지게 만들 것”이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말과 함께 바로 이어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나무를 심는 장면이 이어졌다. 그리고 충북 단양군의 문학술씨가 조성한 조림지역 특히 경제성이 높은 낙엽송과 개량 포플러 등 나무를 심는 주민들의 모습 그리고 구체적으로 산림 유공자로 산업훈장을 받은 문학술이 250만 나무를 심을 예정으로 임업의 기업화를 시도하고 있는 장면을 함께 넣었다. 1969년 제 24회 식목일 행사는 박정희 대통령의 식목행사에 대한 치하 및 식 행사를 진행하지 않고 바로 나무를 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행사를 대신하였다.

박정희 정권 시기 산림녹화 사업의 주 관심사는 외형상으로는 황폐해진 민둥산, 붉은 산을 푸른 산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황폐해진 산은 외관상의 문제 그리고 집중호우 시기 산사태 및 토사 유출로 인한 농작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농가경제의 빈곤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복구되어야 할 대

상으로 인식하였다. 식목 행사 또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동원 한해(旱害)와 홍수 피해의 극복을 위한 조림을 펼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초기 식목행사의 주된 내용은 이전 정권과 같이 '많은 나무'와 '속성수'를 심는 것이었다.³³

그러나 점차 박정희 정권은 속성수의 조림 뿐 아니라 산림, 조림녹화사업을 경제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다. 조림수의 종류로 유실수를 강조하고 농가소득을 올린 이들을 산림기술자라는 이름으로 표창하고, 매해 산림기술자대회를 개최하여 산림을 보다 체계적이며 과학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듯 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조림에 의한 치산녹화의 성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³⁴ 이것은 담화 등을 통해 강조했던 것과는 다르게 전체 국가 예산의 1% 정도 밖에 안되었던 것에서도 예견해 볼 수 있는 것이었다. 적은 예산을 국민을 동원하여 해결하려 했던 것이다. 이것은 산림정책의 한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박정희는 1962년 첫 식목일 행사부터 산림녹화사업의 목표는 미관상의 문제와 홍수로 인해 발생하는 토사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푸른 강산, 푸른 강토, 금수강산 조성을 표방하였지만 식목의 산림정책은 자연환경, 생태적 관심보다는 경제적 측면이 강하였다. 그러므로 산림은 자연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과를 볼 수 있는 산림녹화사업이 주를 이루는, 국민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1960년대 박정희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식목행사 및 산림 정책은 푸른 강산, 금수강산을 만들어 경제발전과 조국의 근대화를 꾀하는 경제적 논리가 강하였다. 1960년대 초반 식목일 행사에서 강조하였던 험벗은 산, 민둥산에 나무를 심어 부강한 국가를 만들자는 논리 또한 박정희 정부의 조국근대화 정

33. 선유정, 『현신규의 임학연구 재적: 과학연구의 사회적 진화』,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134쪽.

34. 강성원, 위의 글, 143쪽.

책 실현의 일환이었다. 식목행사 및 산림녹화 관련 <대한뉴스>의 제작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대한뉴스>의 식목행사에 애니메이션을 삽입하여 국민을 계몽하고, 조림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산림녹화와 관련된 <대한뉴스>의 제작, 상영은 자연스럽게 국민들을 식목, 조림사업에 동원하기 위한 성격이 내포되어 있었다. ‘자발적’으로 동원된 듯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박정희 정권은 자신의 정권을 합법화하는 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실시되었던 식목행사는 자연환경의 보호 및 생태적 측면의 성격은 매우 약했다. 오히려 이 시기 식목 및 조림사업은 경제적 기반을 만드는 것에 중점이 두어져 있었다. 그러나 경제립 위주의 조림계획은 단기간에 성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대단지의 조림지역을 조성하고 그것이 경제성을 띠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참고문헌

- 강성원,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산림법 제정과 녹화사업」, 『한국근현대사연구』 92, 2020, 141~173쪽.
- 강영심, 『일제의 한국삼림 수탈과 한국인의 저항』,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7.
- 대통령 비서실,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1, 최고회의 편, 대한공론사, 1973.
 _____,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1973~1979.
- 배상원, 『산림녹화』, 나남, 2013.
- 산림청, 『한국임정 50년사』, 산림청, 1997.
- 선유정, 『현신규의 임학연구 궤적: 과학연구의 사회적 진화』, 전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 양정심, 「영상기록에 담긴 해방과 한국전쟁의 일상」, 『사림』 제72호, 2020, 237~262쪽.
-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숨은 기적들, 숲의 역사 새로쓰다』, 나남, 2015.
- 전원근, 『1970년대 국토경관의 사회적 구성:개발과 안보의 재현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9.
- 진종현, 「발전의 상징경관으로서의 '푸른 산' - 산림녹화정책에 대한 비판적 연구」, 『국토지리학회지』 50(4), 2016, 539~548쪽.
- 최병택, 「해방직후~1960년대 초 산림계 설립논의의 전개와 그 성격」, 『사학연구』, 90, 2008, 291~336쪽.
-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 2020년 10월 3일 접속)

Abstract

Park Jeong-hee's 'Green Mountain' Construction and economic, ecological cognizance in the 1960s: Focusing on the 'Arbor Day' and 'Forest Rehabilitation' project in <Daehan News>

Kim, Soo-ja (Ewha Womans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One of the yearly events of the forest policy after liberation to reinvigorate bare mountains was 'Arbor Day'. <Daehan News> produced and screened an 'Arbor Day' event every year. The main content and scenes screened in the 1960s show bare mountains and reforestation activities of young students and soldiers. It seemed that the ultimate goal is to make the 'red mountain' into a 'green mountain', and the other is to emphasize that it is 'voluntary' participation by showing groups and individuals participating in the 'Forest Rehabilitation', thus leading to more mobilization. On the one hand, the goal of forest policy was linked to economic development. So the 'real purpose' of the 'Forest Rehabilitation' of Park Jeong-hee was building a basis for economic development rather than creating a natural environment considering organic Relationship with the overall Ecological Environment.

Keywords: <Daehan News>, Arbor Day, forest rehabilitation, forest policy, green mountains, economic development, mobilization

논문 투고일 : 2020년 10월 07일
심사 완료일 : 2020년 10월 21일
게재 확정일 : 2020년 10월 28일